

# 목 차

---

## ■ 남북 경협 현황과 추진 방향

Executive Summary .....	1
I. 남북 경협 추진 현황 .....	2
II. 새로운 남북 경협 추진과 의의 .....	7
III. 맺음말 .....	15
< 토론 > .....	18
■ HRI 경제 지표 .....	26

## 남북 경협 현황과 추진 방향

### □ 남북 경협 추진 현황

- 남북교역 현황: 2005년에도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남북간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가 유지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대북 투자 동향: 1999년 금강산사업 투자 이후 지난해 최대 규모의 대북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반면, 금강산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투자로 이익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열악한 상황
- 남북물류 현황: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증가에 따라 남북간 급증하는 물류에 부응하여 물류체계의 개선이 필요
- 3대 경협 사업 추진 현황: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 사업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안별로 안정적 사업 확장을 위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임

### □ 새로운 남북 경협 추진과 의의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를 중심으로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합의서」 채택: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 북측은 2006년 중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상환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약정함
- 한강하구 골재 채취 사업 추진: 한강하구의 골재 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함, 정전협정상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이용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농·림·수산 분야 협력 추진: 북측은 당국간 농업협력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사항의 세부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중이며 수산협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협의키로 함
- 경제·자원개발 분야 제3국 공동진출 추진: 남북은 제3국 공동진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 맺음말

- 남북 경협도 이제 상생의 구도로 이행하고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남북 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변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 남북 경협 현황과 추진 방향

-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 일시 : 2006년 6월 28일
- 연사 :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수석대표)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 주제 발표

### I. 남북 경협 추진 현황

제가 남북 경협 맡은 지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차, 11차, 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를 해 오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12차 경추위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릴 자격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남북관계, 남북 경협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디에 가서 말씀하실 기회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간의 남북 경협의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려서 어디에 가서 말씀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남북 교역 현황

작년에 남북교역에 1,056백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002~2004년에만 하더라도 7억 달러 수준에서 오락가락하였고 또 2001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4억 달러 수준에서 2~3년 머물렀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더 내려가겠지요? 그래서 1999~2001년에 4억 달러 수준에서 2002~2004년도에 7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2005년에도 10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3년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급격하게 뛰어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교역 업체나 교역 품목 수도 계속해서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협 사업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교역 차원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면,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2005년에 15억 8천만 달러이었던 것에 비해서 아직 3분의 2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간의 상호의존성이 계속해서 증대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대북 투자 동향

투자를 보면 2005년까지 2억 6천 400만 달러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9천 400만 달러, 75% 되는 부분이 금강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사업을 빼면 실제 집행이 된 투자 사업은 7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를 보면 작년 한 해에 상당히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12건이 성립이 되었고, 집행이 5천만 달러 된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는 금강산 사업 하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대부분 소규모 투자이며, 아직까지 이익실현이 되는 수준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대북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4분기 중에만 2천만 달러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작년에 5천만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남북 물류 현황

남북한의 인원과 물자의 교류 현황에 관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동서 양쪽의 도로를 통해서 2004년 말부터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한 해에 차량 6만 대, 인원 40만 명 정도가 동서 양쪽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북한을 왕래했습니다. 그 다음 선박은 작년 한 해에 선박 운항 횟수가 4500회인데 2003년, 2004년에는 2천 회 수준에서 작년에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어서 선박이 서로 출입할 수 있는 항구가 남북 각각 세 곳에서 일곱 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박 운항 횟수로 두 배로 2000회 수준에서 4000회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고 잘 아시는 대로 제주 해협을 북측 선박들이 통행할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진전이고, 상호 신뢰의 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의 경우에 작년 한 해에 208회, 왕복 기준으로 104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서로 항공을 통한 왕래로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6.15때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왜 서해로 나가 가지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굳이 ㄷ(디근)자로 돌아다녀야 되느냐? 바로 순안공항과 김포공항을 바로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서로 합의한 건 아니지만 구두로 합의 내지는 지시가 있었지만 그건 실현되기가 아직 요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3대 경협 사업 추진 현황

경협 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잘 아시는 대로 3대 경협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일 대표적인 개성공단인 경우에 시범단지 2만 8천 평에 15개 기업이 입주해서 13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중이고 현지 인력 7천 명까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차 본 단지의 5만 평에 작년 9월에 입주업체 2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단지는 작년 9월에 이미 입주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장 건축을 위해서 준비중이고 또 연내로 1단계 100만 평을 분양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1단계 부지 개발 공사가 거의 75% 이상 공장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어 연말까지 입주업체들이 다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본 단지에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을 2002년 11월에 제정한 이후에 상당히 상세한 14개 하위 규정도 마련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간의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부속 합의서들을 채택하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1차 본 단지의 공장 건축과 입주가 진행이 되려면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금융지원 방식입니다. 금융 지원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한 끝에 신용보증기관에서 업체 당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자금의 70%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업체 당 50억 원 범위 안에서 손실 발생액의 90%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 제도도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시범단지 입주 업체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막상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철도 도로 연결이 두 번째 중요한 경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도로는 다방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이라는 게 도로가 지나가는 노선과 그렇게 10Km 떨어져 있지도 않고 고작 몇 백m 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25일 시험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건 준비가 다 끝났다는 뜻인데 그것이 하루 전날 취소가 되고 철도 운행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납득이 가는 이유를 말해주는 분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은 작년 8월에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땅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땅을 잘라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2006년 3월말까지 120만 명이 다녀온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억 1,000만 달러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되었고, 또 지금 세계관광기구(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와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전문 기관들과 협조해서 금강산 관광 특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종합 개발 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성이나 백두산 쪽으로 관광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백두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했더니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기차 육로로 가면 이틀 정도 걸리며, 도로나 철도나 사정이 안 좋아서 백두산 관광이 되려면 비행장 활주로를 포장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스팔트를 보내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나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때 업데이트 된 통계를 말씀드린 정도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II.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 추진과 의의

-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를 중심으로

###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 채택

제12차 경추위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쟁점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작년 7월 제10차 경추위에서, 소위 우리는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권을 우리한테 허용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는 이후에 그것을 구체화하는데 꼬박 1년이 걸린 것입니다. 규모와 조건 방식 등이 쟁점이 되어서, 이 부분의 이견을 좁히는데 1년이 걸려서 이번 경추위 직전에 거의 사실상 실무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경추위를 한 동안 제대로 안 하다가 하자고 한 것은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문제가 마무리 됐으니까 받아 가자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였고 미화 8천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가 받을 것도 문제였습니다. 받을 것도 문제인 것이 처음에는 지하자원 개발권 수준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탐사하고 개발해 가지고 그걸 가공처리해서 가져가는 권리를 주겠다는 식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런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광산업이라는 게 옛날보다는 탐사기술이 좋아져서 엄청 나아졌지만 상당히 투기성이 강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가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연하게는 안 되겠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지하자원 개발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한 대가 상환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되 지하자원 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 대가를 못 받는 그런 식으로는 못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측에서 말하자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가행 광산을 우리한테 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조건이 나쁜 것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북측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광산 개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가행 광산 중에서 조금만 신규 설비 투자를 하면 물량이나 질적인 면에서 훨

썬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위험성도 없고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자원 개발권으로 대가를 주겠다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구체화 시켜서 리스크가 없고 확실하게 경공업 원자재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 문서를 자세히 보시면 물론 지하자원 개발을 가지고 대가 상환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되면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다른 걸로라도 상환을 해야 된다. 지하자원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상환을 미루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구도를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공업 제품 대가 상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회에 3%를 갚도록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북측에 대가 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거의 모든 걸 장부에 달아놓고 주는 방식이었는데, 주면서 첫 회에 단 1% 라도 일단 상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걸 왜 저희들이 집착을 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남북간 경협과 관련하여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국내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대가 상환의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이런 게 과연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는 그런 장부에 달아놓는 방식이 아니고 해서 이번에 거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상환 받는 모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고받는 모습을 만드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처음에는 3년을 요구했다가 5년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회에 3%, 이것도 10%, 5%, 얘기가 나오다가 3%로 타협을 했지만 어쨌든 받는 당해 연도에 3%를 상환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세 번 밖에 안 되지만 경추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역점을 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북측에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까? 저는 법과 대학을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결국 경제는 공짜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는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리고 보통 협상이나 회담 나갈 때 처음에 제시할 때 카드 자체를 나중에 타협의 여지를 생각해서 엇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들고 나간 것만큼은 안 되지만, 어쨌든 과거의 관행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진전된 조건으로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 조건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상 이자율을 1%, 연체 이자율을 4%로 한 것은 남북간의 경협 합의서에서 연체 이자율이 규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회에 3% 상환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연체 이자율을 4%로 규정한 것들은 대가 상환 방식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북측에 가서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지하자원 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치 기간 5년을 잡아준 것도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서 상환 능력이 생기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 한강 하구 골재 채취 사업 추진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은 한강 하구의 골재 채취 사업입니다. 사실 이미 민간 기업들이 북측에서 모래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육로로 들여오고 있는데, 개성 쪽에 경인선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을 가지고는 수송비가 너무 비싸게 먹혀서 활발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동서 도로는 하루에 네 번 엽니다. 그런 수송 수단으로는 비용에 비해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먹히고 해서 한강 하구에 엄청난 양의 토사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북측은 계속 임진강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강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

만 결국은 같은 지역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정 매장량이 10억 m<sup>3</sup>를 넘습니다. 10억 8천만 m<sup>3</sup>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골재라는 게 부피나 무게에 비해서 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수송해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다면 수도권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더 이상 멀리 실어서는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수도권의 연간 골재 수요 4,500만 m<sup>3</sup>를 20여 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차, 11차, 12차에 걸쳐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경협 사업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북측이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이 그 다음 경협 사업을 하는 데에 제일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금강산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없겠느냐 그러면서도 전략 물자나 다른 규제에 걸리지 않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가장 단시일 안에 북한에 현금 수입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결정적인 난관은 군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다 깔아놓고 그 옆 도로에 하루에 수 백 대가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철도 부분은 군사적 보장 조치가 없어서 시험 운전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군사 공동 구역 안에 우리 준설선들이 들어가서 모래 골재 채취하는 걸 북측 군부에서 허락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가장 단기간에 가장 확실하게 북측에 현금 경화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이 있어서 일단 우리 합의서 내용에 군사적 보장 조치가 취해지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기로 한다고 해 놓고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준설을 하게 되면 상류에 홍수를 막는데도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농·림·수산 분야 협력 추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농림 분야입니다. 농업은 어차피 1년에 한번 수확하는 것이지만, 특히 축산은 1년에 3~4번 정도로 여러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생육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축산의 경우에는 부산물을 북한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인 비료로 쓸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북한의 소위 돈사나 계사, 축사들의 유휴생산능력(Idle Capacity)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유휴생산능력이 있는 이유가 사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원자재가 없어서 일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재를 주면 자기들이 생산적인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측에 가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 제복 입혀서 네 거리마다 교통 정리하라고 세워 놓았는데 10분, 15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차를 교통 정리하는 건 생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리랑 축전에서 6만 명이 나와서 카드 섹션도 하고 매스게임도 하는데 돈 안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원자재가 없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제일 병목현상에 걸리게 되는 것이 결국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흑연 광산 하나 개발해 놓고 순조롭게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전기 문제입니다. 전기가 자꾸 끊어지고 전기가 공급이 되더라도 전기에도 압과 전류가 고르게 공급되는 질(Quality)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특히 고급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의 질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북측에는 전기 질을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지만 에너지가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르는 경험 사업의 기준이 첫째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어야 저쪽이나 이쪽이나 서로 마음이 편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전기가 들어가는 사업은 애당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업은 에너지를 동시에 같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가 전기를 보내 주니까 가능한데 다른 지역에 가서 전기가 많이 드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경추위에서 북측에서 비료 공장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비료 공장에 관한 얘기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어차피 지금 남쪽에서는 환경 보호, 웰빙이라고 해서 농사지을 때 비료를 적게 쓰니까 남쪽 비료 공장에는 유희생산능력이 있지 않느냐 여유가 많으니까 새 걸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뜯어서 옮겨주면 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비료 공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료 공장을 지어주면 이게 전기 다소비 사업인데 가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농업이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될 남북 경협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농림부, 농업 분야 협력 위원회 차관급으로 해서 작년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다른 모든 경제관련 분야, 남북 협의하는 것은 다 경추위 산하로 되어 있고 경추위 산하의 보통 국장급들이 수석 대표가 되어서 만납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의 차관급 회담이 경추위와는 별도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서 경추위와 같은 수준에서 작년 8월에 한번 접촉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시범 협동 농장을 선정해서 공동으로 운영하자든가, 종자 생산 가공 처리 보관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등 농업 과학 기술 분야 협력, 또는 북한의 산림녹화도 합의를 대상이었습니다. 북한의 산림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식량 증산한다고 나무를 베어내고 옥수수 심은 게 산림만 황폐시킨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산림녹화 분야에 협력을 하자는 합의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한 걸음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와 농업은 전혀 다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사만 지었지 농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업이 되려고 하면 이게 품질관리부터 시작해서 시장 개척 등 굉장히 많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품질 관리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생산하기 전부터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을 생각해야 되고 농업도 고도의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비즈니스입니다.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1년에 한번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업종인데 공급 부족 시대의 패러다임 하에서 보면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지요. 농사를 지으면 누군가 먹어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 과잉이라는 전제 하에서 또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농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농업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체로 보면 지금 북한 경제의 최대의 문제는 외국에서 새로운 자원이 투입이 되면 그걸 먹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의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이 가능한 수준의 물건을 못 만들어 내는 것은 그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자만 주는 것 가지고는 허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최소한 몇 명이 가서 지도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그게 잘 안 되어서 여태까지 작년도 8월에 합의해 놓은 것이 하나도 안 굴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얘기를 하면 수산 얘기가 바로 따라 나오겠지만 수산 분야도 실무 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리고 합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합의 사항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수역을 설정해서 같이 어로 작업을 하다던가, 어제도 TV에서 상당히 깊이 심층보도를 하던데 서해상에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통계 문제도 협력을 하자든지 특히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서 양식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하자고 합의하고, 양식 사업을 위한 우량 품종 개발 기술 교류 등 온갖 합의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서해 문제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 ■ 경제 · 자원개발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추진

또 한 가지 이번에 특이한 것은 자원개발 분야에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북측이 먼저 제시를 해서 우리가 합의문에 담아 준 건데, 자세한 사정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 극동 지역에 탄광과 산림 개발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곳에 가서 탄광 산림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적절한 수준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신 설비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몫을 나누어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 확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일단 합의문에 담아놓았지만 이것은 도대체 현장에 한번 가서 현실을 보지 않고서는 아직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뭘 어떻게 만들어 놓고 뭐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뭐든지 남의 힘 안 빌리기를 고집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보다 역량이 떨어질 때는 일단 바짝 쫓아갈 때까지는 남의 힘을 빌리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없이 공부하는 것과 선생님을 두고 공부하는 것과의 차이인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 두는 걸 지독하게 싫어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쪽에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걸 보면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가지고 있는 자원 개발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거기에 공동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러시아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Ⅲ. 맺음말

정부로서는 남북 경협 사업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특히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지금 당장에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입주해서 거기에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이런 식으로는 사업을 못한다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특히 개성공업지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개성공업지구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적어도 개성공업지구까지만 가는 데에는 그냥 출입증 체제로 해 주기로 합의서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천에 안 옮기고 있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까지 만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시내에 들어갈 때는 다른 복잡한 절차를 밟으라 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업지구만큼은 국경에 도착하면 다른 나라에 갈 때와 똑같은 일반적인 통행, 통관 절차를 거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에 네 번 정해놓고 이 시간에 오면 그때 한번 넣어주고 문 닫고 그런 식의 통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물자 수송하는 걸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로상에 안 보이는 곳까지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시간 만에 한번 열어서 들어갔다 들어 가면 바로 5분, 10분이면 개성공단엔 갈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그 다음 문 여는 시간 맞춰서 거기에서 30분 기다려야 한번 나오고 하는데, 이 방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특히 물자 수송의 경우에는 물류비용을 엄청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 훨씬 더 많은 자유권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은 불과 6000~7000 명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적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본 단지 100만 평으로 확대되면 어떤 업

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소 7~10만 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선 개성 인근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성 인근 몇 사람들과 북한 전문가들한테 물었는데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개성공단으로 통근이 가능한 범위 안의 인구가 28만 정도 된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28만 명 중에서 10만 명을 뽑아낸다고 하면 소위 노동 가능 인력을 전부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공급과 관련해서 북측의 얘기는 자기네들은 북한 전역에서 우수한 인력을 골라서 줄 테니까 개성공단에 숙소를 지어 달라고 합니다. 자기네들 표현은 살림집인데 우리는 살림집하면 왜 우리가 북한 주민들 살림집까지 지어 주냐는 그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독신자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숙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우선 기숙사부터 해결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기혼자 숙소 등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고 합니다. 어쨌든 개성공단에 100만 명이 본격적으로 차기 시작하면 사실은 개성 인근에서 컴퓨터 가능한 인력만 가지고는 인력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숙소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자연히 노동력의 질이나 인력의 질들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하고 일방적으로 골라주는 방식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노무 관리에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임금 직불 문제도 합의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금 직불을 안 하는 문제가 국제 사회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성공단에 노예적인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데에 대한 비판은 최근에 주한 미대사와 외국인 공관장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여주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노동 환경이 어디보다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좋은 노동 환경, 근무 환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라는 것도 그 이상 임금 받는 사람이 북한에 없으니까 착취니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원산지 문제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해 내는 물품들을 국내 시장에 푼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모든 게 공

급 과잉 상태인데 그걸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사실은 농업혁명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 혁명 문제도 북한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농산물 일부를 반입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농민들의 반발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개성공단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은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토론

(이영선 연세대학교 교수) 박 차관님께서 기자가 무서워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오늘 듣다보니까 토론자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차관님은 행정을 하시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마는 사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토론을 유발하는 토론자로서는 제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치·안보를 전공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통일부와 재정부의 시각 차이를 말씀해주실 수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결국 오늘 주로 남북 경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경협의 목적이 무엇이나 그런 생각부터 가지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이라고 본다면, 경협하자는 것은 우선 우리가 평화 유지하자는 얘기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인도주의적 지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것을 억제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협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차관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의 시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북한의 변화, 이것도 어떻게 유도해 내느냐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어떻게 분업해서 북한도 잘 되고 아울러 남한에도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것이 또 하나의 경협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시고 박 차관님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할 혹은 어떻게 보면 잘못 갈 수도 있는 부분들, 혹은 강조해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개발 개혁을 유도하는 부분에서 박 차관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요새 관찰하기는 북한의 인민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굉장히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북한이 배급 체제가 붕괴되고 시장에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인민들은 그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노력하고 여기저기에 밥 얻으러 다니고 공짜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도 계산해 내면 조그마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게 과거에 비해서 민간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민간 경제 부분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물론 개념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북한의 개혁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개혁이 확대 되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후에 북한의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수많은 동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이 위에서부터의 이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작하는 이행인데 북한의 지금 변화는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개혁(reform from the bottom)입니다. 밑에 인민들이 시장에 가서 뭘 배우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이제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개혁 혹은 변화를 좀 더 밀어주기 위해서는 오늘 박 차 관념께서 말씀하신 관료들, 경추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 테이블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공짜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가를 빨리 받으시려는, 그 대가도 보니까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1%, 3%, 4% 정도의 것인데 그런 걸 제시해서 시장 기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경협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철저히 강하게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직불 문제도 연결이 됩니다만, 개성공단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 얘기는 좀 더 드리겠지만,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간다고 할 때 성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공단 포럼이라는 조직을 관여하고 있는데 거기

에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많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으로 들어간 기업들이, 다 돈 벌고 다 성공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꼭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산업적인 페이스로 돌아가게끔 하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범기업으로 들어간 몇 기업은 망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도저히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북한 정부에도 보여주고 남쪽 정부에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시장 경제를 가르쳐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그것이 남북 경제 통합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소노코 쿠진웨어(리빙아트 전신)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남쪽 기업에 대해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할 때는 도덕적 해이가 나오는 거지요.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키는 것만큼 시장 기구에 마이너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기업들이 사업적 베이스로 개성공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아울러 북한 정부에도 철저한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100% 그렇게 되는 것은 없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직불제 같은 건 우리가 되도록 빨리 성취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손실 보전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정의를 잘 하셔서 너무 과도한 버전은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해야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문제의식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철도 말씀을 박 차관님께서 몇 차례 하셨는데 제가 지 지난 주에 평양에 가고 개성에서 들었던 북측의 입장은 남측에서 발표한 입장과 상당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도 시험운행 행사의 무산이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이냐에 관해서 북측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군사보장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약속인데 서울이 그런 걸 무시하고

총론으로 합의를 해 놓고 각론으로 합의가 안 되었는데 서두르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물론 속으로는 생각을 하실 것으로 믿는데 남북 관계의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지만 이 시험운행 행사에 있어서 남측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일부가 협상을 하니까 재정경제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KBS에서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며칠 고생했는데 저도 아주 피해자이고 정부도 피해자인데 다음 행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차 경추위에서 결국 800억 원 상당의 자재 지원과 시범행사를 교환하는 것으로 운곽을 잡고 있는데 철도 행사를 다시 해야지만 800억 원 상당을 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묵시적인 합의인데 물론 합의문에는 없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에는 그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통일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800억 원 상당의 자재가 넘어가는 것과 시범 운행의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명봉 국민대학교 교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 중에 금융지원 방안이라든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법학자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이 성공하려면 법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만 되겠다, 법제적 기반 위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 그것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우선 당면해서 가칭 「개성공단 사업 지원법」과 같은 그런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이 있다면 아까 말씀했던 입주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제도의 실시라든지 그 밖에 사업 활성을 위한 어떤 정책 집행이 그러한 법적 기반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사업 지원법 내지 개성공단에서의 경험 지원법이고 할까 그러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이 초기에는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경제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경협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언젠가는 벽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북한 GNP를 발표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발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계산의 근거를 마련하는게 어려운데 과연 북한 측이 북한의 경제 통계를 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방 한계선 문제는 군사보장 합의서에서도 남북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지에 관해서 부처간에 협의가 있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철도 시범 운행과 관련해서 실제로 북측의 군사보장 합의서를 받지 않고 추진을 한 것은 우리 측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 통일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 시험운행을 하자는 의사 결정을 서로 공식적으로 합의서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랜카드의 색깔까지 다 적혀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시험운행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북한의 시스템을 전제로 생각해볼 때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겠느냐, 또는 어디까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우리한테 써줬겠느냐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제일 톱까지 결재를 받았다고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래서 국방위원장까지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군부에서 양해를 받아서 그러한 합의가 나와서 북측에서 그러한 합의를 해 줬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군부에서 정식 군사보장 합의서를 눈으로 보지 않고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담에 나갈 때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토론해 가지고 위임(mandate)을 받아나가면

그 위임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지 그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북측도 마찬가지로 지일 텐데 시험운행에 관한 그 정도의 협의를 할 정도라면 내부에서 다 이견이 정리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또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철도 시험 운행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견 오히려 합의서에 '여건이 조성되는 데에 따라' 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아주 명확한(clear) 양해가 있었습니다. 철도 시험 운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준다는 것은 동시도 아니고 그 이후에 준다는 걸로 되어 있고, 오히려 거기에 철도 시험 운행이나 군사적 보장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도 예상되고 해서 '여건이 조성되는 데에 따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을 막상 써 놓고 보니까 우리 쪽보다 북측이 더 그 표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시험 운행이 되면 경공업 원자재를 즉시 제공을 시작한다고 명확하게 적어 버리면 피차간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서 그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 보다, 어차피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안 쥐 버리면 그만인데, 북측 입장에서 보면 철도 시험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여건이 아직도 조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여건 속에 다른 게 담겨 있었다고 우리가 자기네처럼 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종결 회담할 때 합의문을 읽으면서 이걸 읽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여건이 조성되는 데에 따라' 라는 수식어는 '철도 시험 운행이 이루어지면' 이라는 뜻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북측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도 확실하게 못을 박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종결 회담의 TV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도 시험 운행이 이루어져야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지원 방안은 이영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훌연히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그런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바랄 수는 없지만 기업

이 몇 개 망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게 경제 원리를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런데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이걸 계속 보증해 주자는 옵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증까지 해 주게 되면 전통적으로 보증을 전문으로 하던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런 곳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후하게 해 줄 것 같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남북협력기금이 할 거냐 신용보증기금이 할 거냐 라는 걸 가지고 정부가 고민할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패 사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면, 일단은 금융 지원의 첫 단추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여태까지 다른 기업에 신용보증해주는 똑같은 잣대로 컨트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사업 지원법을 별도로 만들 생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법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기에 북측에 법적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서나 온갖 다 좋은 것 적어놓고 그 중에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장 교수님은 남쪽에서 그런 지원법을 만들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온갖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상의 특별한 지원을 해가면서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영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그런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지원법을 따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경제 통계는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마다 제일 처음 부딪히는 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통계라는 게 결국은 그 나라의 국내 사정을 아주 다 살살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북측이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협력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매사가 북한 주민을 외국에 자꾸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너희는 오지 말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제 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진을 하면 그나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내일 또 북한 경제 개발에 관한 지식 공유 국제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오히려 국제기구나 그런 쪽에 이걸 국제기구 쪽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북방 한계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전혀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RI

---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024

---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4	3.4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3	3.2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2.1	2.3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4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거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8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5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7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2)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0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3)	(14.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8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